

# 광주 동구-나주시, 빗고을요양원 관할 다툼 '점입가경'

### 법인 소재지 동구, 시설 소재지 나주에 이관 요구하다 분쟁조정 신청 "현행법상 이전 맞다" "관리 업무만 떠 넘기기"...행안부 내달말 결론

광주시 동구와 나주시가 빗고을정신요양원 관리권을 둘러싸고 1년 여 마찰을 빚다 결국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동구는 지난 3월 말 빗고을정신요양원 지도감독 업무를 나주시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행안부에 분쟁조정신청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주시에 예산 지원을 제외한 지도감독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유다.

243개 병상을 보유한 빗고을정신요양원은 나주시에 있는 정신 요양 시설로, 원래 동구 용산동

에 있었던 이 병원은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 병원의 운영법인(은성복지회)은 광주시 동구에 남아있다. 정신 요양 시설로서 복지부와 광주시 등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비 26억 5000만원, 시비(광주시) 11억 5000만원 등 총 38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동구는 소재지 이전 이후에도 빗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를 계속 맡아왔다. 지도감독 내용은 시설 운영 관리 실태와 안전 관리, 소방점검, 환자 및 종사자 인권실태, 회계운영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동구에서 매년 상·하반기 나주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기에 관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5월께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해 "현행법에 맞게, 설치허가권과 별개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도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동구가 나주시에 보낸 업무 이관에 대한 공문을 반송 처리하고 이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나주시는 "빗고을정신요양원 설치 허가 과정보다 졸속이었으며, 이후 28년간 이어 온 지도·감독 업무를 법조문 한 줄만을 근거로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1996년 빗고을정신요양원을 광주시에서 나주시로 이전할 당시, 시설 소재지인 나주시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신요양시설 허가를 내줬다. 당시 법적 시스템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졸속으로 타 지자체에 허가를 내줬

며, 이후 묵시적으로 허가권자가 지도·감독해 왔다는 것이 나주시 주장이다.

나주시는 서울정신요양원과 서울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등 시설이 경기도에 있어도 법인 소재지인 서울시가 지도·감독 중인 사례도 전국에 4곳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및 감독 권한은 광주시에 두고, 시설 지도·감독은 나주시에 두면 행정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행정시스템상 직원관리·보고 권한을 다른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으려면 기존 정신요양원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신고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복지부의 법률자문과 관련, "지난 2023년 4월 광주시 동구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허가권자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시 동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 및 질의를 이어와 '지자체 간 협의하라'는 답변을 끌어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동구는 "요양원 이전 당시 나주는 옛 광주직할시의 권역 내에 있었던데다, 1996년에 복지부로부터 '요양원 이전 부지 관련 설치 허가는 기존 설치 허가권자가 내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해만 해도 나주시 부시장 등과 협의가 이뤄져 상·하반기 나주시가 직접 지도 점검을 나섰는데, 정식 이관절차를 밟다 보니 나주시가 돌연 이관을 거부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두 자치단체가 1년 넘게 요양원 관할권 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 관리가 까다롭고 주민들이 받기 싫은 시설을 맡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시설을 두고 자치단체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행안부는 동구와 나주시의 의견을 모아 오는 5월 말 안건을 행안부 지자체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업무 이관 여부를 결정내릴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동차세 미납 안됩니다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세무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까지 다 종말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법원 "경찰 내부 규칙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한 광주 남부경찰 위법"

정보 미공개 취소 소송 원고 승소

'경찰청 예규'를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행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는 A씨가 광주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신의 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병소견서를 발급했다'며 광주남부경찰에 병원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이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동생의 아

들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불송치 각하결정을 하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일부 서류를 공개하고 일부 서류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들어 미공개 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에서 '수사협조의뢰서나 수사보고서, 사건종결시 심사의견서의 경우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도 정보공개 취소 처분의 근거로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고소인으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권리가 있고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근거로 든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학동 4구역 브로커에 5억원 건네고도 무죄?

### 시공사 계약까지 처벌 확대 안돼 조합 임직원엔 돈 준 1명만 징유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당시 브로커 문홍식씨 등에게 수억원을 건네주고 철거사업 등을 재하도급 받은 업체 관계자 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자 A(42)씨와 B(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9년 1월께 학동 4구역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문씨에게 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하도급 공사수주를 위해 다른 브로커 D씨에게 지난 2019년 3월께 1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조합과 지장물철거와 정비기반공사를 계약한 뒤 2019년 7월부터 문씨에게 2억원,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A·B씨와 C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같은 이유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C씨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재개발조합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도시환경정비법과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설계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이미 선정된 시공사 등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자신의 업체를 선정되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씨가 직접 찾아가 5억원을 요구해 이를 건넨 A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조합이사를 통해 문씨에게 2억원을 건넨 C씨는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B씨는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들에 청탁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익명 채팅 알몸 사진 받은 10대 무죄

13세 여학생과 채팅을 하다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10대 남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랜덤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

게된 B(13)양이 직접 촬영한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군이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익명 채팅방에서 이름·나이·성분·성별을 거짓으로 말해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피해자가 타 유튜브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올려둔 나이와 성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